

# 안전충남 2050 비전위원회 워크숍

- ◆ 일 시 : 2017년 3월 10일 (금) ~ 11일 (토)/ 1박 2일
- ◆ 장 소 : 아트센터 고마(공주시 웅진동 소재)

# 「안전충남 2050」 총괄·분과위원회 합동워크숍

## □ 워크숍 개요

- 일 시 : '17. 3. 10(금) ~ 3. 11(토) / 1박2일
- 장 소 : 아트센터 고마(공주시 웅진동 소재)
- 참 석 : 「안전충남 2050」 총괄·분과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충청남도재난안전센터 연구원 등 45명
- 내 용 :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사업 도출 방안

##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제 1 일 차 (3.10)	13:30	14:00	30	• 참석자 등록	사회: 안전비전TF팀장
	14:00	14:10	10	• 개회사(위원장)	
	14:10	14:15	5	• 인사말씀(재난안전실장)	
	14:15	14:55	40	• 초청강연(경제비전 2030 실행계획 수립사례의 함의) - 백운성 박사 (충남연구원) • 토론 - 류희인 교수, 이상진 선임연구위원	사회: 이재은 위원장
	14:55	15:10	15	• 휴 식	
	15:10	17:10	120	• 충청남도 재난 안전 세부사업 설명 (발표 : 조민상 교수) • 비전 5대 목표별 주민요구 분석 현황 (발표 : 이주호 교수) • 비전실행 세부사업 계획 작성예시 설명 (발표 : 조 성 연구원)	진행: 김점훈 교수
	17:10	17:20	10	• 휴 식	
	17:20	18:00	40	•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및 신규사업 발굴 방안 논의	분과위원회 별
제 2 일 차 (3.11)	08:00	09:00	60	• 조 식	
	09:00	11:00	120	• 재난 취약지역 현장방문 및 해산	충청남도자율방재단 연합회장 이은국

---

---

## 목 차

---

---

- ◆ 충남경제비전 2030과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백운성 기획조정연구부장 (충남연구원) ..... 1
  
- ◆ 충청남도 재난 안전 세부사업 토의  
    조민상 교수(백석대학교) ..... 13
  
- ◆ 5대 목표별 주민요구와 실행계획 발굴 방향  
    이주호 교수(세한대학교) ..... 25

# 충남경제비전 2030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백운성 기획조정연구부장  
(충남연구원)

안전충남2050 분과위원회 통합워크숍(3.10)

## 충남경제비전 2030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1. 충남경제비전2030 수립배경
2. 충남경제비전2030 주요내용
3. 충남경제비전 실행기반 구축

충남연구원 백운성 연구위원  
wsbaek@cni.re.kr

## 충남경제비전2030 수립배경

# 1. 경제비전 2030 수립 배경

## 1. 충남 경제의 도전과 대응

- **충남 경제, 빠르게 성장했지만 취약한 지역경제구조와 불안한 향후 전망**
  - 경제성장률 전국 1위, 2000년 이후 전국 최고 수준의 성장률로 경제 규모 확장
  - 대기업, 제조업, 수출중심의 충남 경제구조, 대외적 경제충격에 취약한 산업구조
  - 디스플레이, 반도체,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의 주력 제조업의 성장 둔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부재
-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
  -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시대로의 진입,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 가속화
    -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하락, 저성장 기조로 전환
  - 금융위기(2008년) 이후 **경제전반의 저성장 기조 확대 및 경기변동성 저하**, 수출불황이 내수불황으로 전이
    - 3.7%(2011)→2.3%(2012)→2.9%(2013)→3.3%(2014)→2.6%(2015)→2.8%(2016, 한국은행)
-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한 새로운 경제산업 정책 방향 설정 필요**
  - 현재 충남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 필요
    - 충남 지역 경제와 산업, 각 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한 미래 방향 정립 필요
  -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이 필요한 충청남도
    - 국내외 경제 및 산업정책방향에 대한 검토와 전망을 통해 21세기 산업구조개편의 선두자리를 선점하고 대한민국을 견인할 충남의 경제비전 수립 필요

충남경제비전 2030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 1 |

# 1. 경제비전 2030 수립 배경

## 2. 민선6기 공약사항의 구체화/ 새로운 도정 목표의 필요성

-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종합경제비전 수립**
  - 충남경제비전을 통한 경제전망과 전략 수립
-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산업 기반 조성**
  - 주거, 문화, 의료, 교육이 순환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청년일자리 창출과 자영업 및 서민 정책 지원
  - 해양건도 충남의 항공, 항만, 교통, 물류기반 구축
-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 발굴·육성**
  - 첨단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 주력산업(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자동차)혁신과 고도화
  - 영상위원회 설치 및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서해안 스포츠·레저산업 육성 및 관광벨트 조성



충남경제발전비전 수립 | 산업기반 조성 | 신성장동력 | 문화·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사회적 경제, 동반성장 등 함께 누리는 정의로운 경제생태계의 토대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자영업에서 기업까지 **행복한 성장**

\* 출처 : 민선 6기 도정방향 기자회견 자료(2014.12.18), '3+3'행복 삶터, 늘 새로운 충남

충남경제비전 2030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 2 |

# 1. 경제비전 2030 수립 배경

## 3. 충남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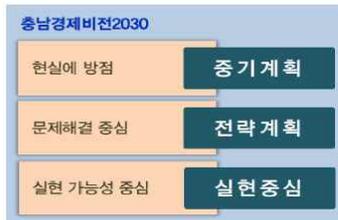


충남경제비전 2030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 3 |

# 1. 경제비전 2030 수립 배경

## 4. 경제비전 2030 수립의 주안점

- 지방정부 주도의 **참여적 소통적 계획**
  - 지방정부 주도의 기획과 도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등 전 분야의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계획
- 충남 경제에 대한 명확한 **현실진단과 미래에 대한 고민**
  - 충남에 대한 면밀한 현실진단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통한 행복한 성장의 방법 모색
- 충남에 대한 미래 비전의 제시와 **실천방안의 모색**
  - 충남의 미래에 대한 담대한 비전의 제시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주체의 실천전략 마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발전**
  -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발전전 계획



VS.



충남경제비전 2030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 4 |

# 1. 경제비전 2030 수립 배경

## 5. 경제비전의 기획 및 수립과정

- **충남경제비전위원회 (18인의 전문가, 위원장:도지사)**
  - 비전계획 수립의 방향 및 주요 의제 설정
  - 총 8회에 걸친 경제위원회(2015년), 제2기 위원회 추진 (2016년, 행정부지사 주재)
- **도민, 전문가 참여 및 의견 수렴**
  - 경제비전 설정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각 개별 경제주체에 대한 의견 및 아이디어 수렴
- **경제비전연구단 및 경제비전추진단**
  - 경제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 및 정책사업 발굴
  - 경제비전 사업의 공동 발굴 및 계획간의 정합성 제고



# 1. 경제비전 2030 수립 배경

## 5. 경제비전의 기획 및 수립과정



# 충남경제비전2030 주요내용

## 2. 경제비전 2030 주요 내용

### 1. 충남경제가 나아갈 방향 정립

- 1 인재를 육성하고 유치, 새로운 일자리 발굴**  
\* 미래 충남을 이끌 인재와 일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 확보
- 2 새로운 성장동력과 창조적이고 공정한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 차세대 에너지, 차세대 자동차, 융복합 산업 등 새로운 분야 개척
- 3 창조인재 유치를 위한 매력 있는 정주여건 구축**  
\* 지식기반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유입
- 4 지역간, 부문간, 계층간 격차 해소**  
\* 외부충격에 따른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보
- 5 세계와 교류를 위한 개방형 인프라 구축**  
\*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 유라시아 대륙과 접근성 제고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충남 경제 비전과 전략 수립 필요**

## 2. 경제비전 2030 주요 내용

### 2. 충남경제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충남경제비전 2030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 9 |

## 2. 경제비전 2030 주요 내용

### 3. 2030년의 충청남도



충남경제비전 2030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 10 |

## 아산만 프로젝트 (아산만권 메가클러스터 조성)

FTA · TPP, 중국의 뉴노멀화 등 세계경제의 다변화에 따른  
충남 산업거점의 재창조와

혁신창출을 위한 산업 · R&D 인프라 확충

### 아시아 투자산업지역 조성 및 연계 교통망 확충

- **서산(가로림만)~천안·아산(경기남부)**를 연계하는 아시아 최대의 산업집적지 조성
  - \* 7개 산업단지 특성화, 한중경제협력단지 및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 **대산항·당진항 항만확충 및 항만과 연계된 다수단 내륙 교통망 확충**
  - \* 연계교통망(대산-당진/당진-천안/제2해안 고속도로, 당진항 인입철도) 건설
  - \* **서산비행장 민항기 취항** 및 중국과의 열차페리 도입 검토

### 산업화 거점연계를 통한 R&D와 신산업 창출거점 조성

- **천안아산 거점을 중심으로 북부권 지식산업서비스 특화 지구 조성**
  - \* 지식산업혁신센터 조성, 과학벨트 SB-Plaza연계 R&D거점화 추진
- **충남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재도전 펀드 조성** 등의 인프라 확충
- **기업가정신혁신센터** 설치 및 창업 지원

### 경기도, 수도권과의 협력적 분업 및 상생발전 기반 조성

- **지역산업 특화지원센터**의 공동 이용 등 협력적 산업발전정책 공조 추진
- **한국 및 동아시아 대응 공동의 환황해경제구상** 추진



## 청색(Blue)산업 육성 프로젝트 (새로운 가치의 미래에너지와 해양 신산업 육성)

기후변화 · 온실가스 감축 등에 미래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인류공동의 미래자원인 해양 신산업의 발굴과 육성

### 수소에너지 산업기반 확충 및 수소경제 구현

- **지역산업과 연계한 융합형 수소산업 육성**
  -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2,324억원)**
  - \* 수소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실증기반 구축 및 Complex 시범단지 조성**
- **충남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 \* 수소경제구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 화력발전설비의 친환경 · 저탄소화 추진

- **국가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친환경 · 저탄소 에너지 생산기반 구축**
  - \* 친환경 화력발전 부품소재 산업단지(Low-Carbon Park) 구축
- **화력발전설비 연계 인력양성 및 관련 복합산업(미세조류, 바다오실 등) 육성**

### 해양 신산업 및 연안관광산업 육성

- **국립생태원 및 해양자원기반의 생태해양산업 R&D Complex 조성**
  - \* **의생학(擬生學, 생물모방) 연구센터** 건립, 해양 신소재 사업화센터 구축
- **해양치유(헬스케어)산업 기반 구축 및 서해안 관광산업 거점 조성**
  - \* **해양자원 활용 휴양 · 치유 · 건강증진 공간 조성** 및 해외 관광객 유치 추진
  - \* **안면도관광지, 태안기업도시, 천수만 국제관광 · 휴양도시** 등 주요 거점 도시 연계
  - \* **가로림만-천수만-금강을 연계하는 서해안 관광레저산업 거점 조성**



## 행복 공동체 프로젝트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작은 경제·공동체 육성)

도시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원형 정주-복지체계의 모색과

지역의 특화된 경제체계의 구축과 육성

### 새로운 전원형 정주체계 구축 및 사회복지망 확충

- 귀촌 문화예술인·과학기술인 등 지역참여 복합주거문화단지 조성
  - \* 공동공간 및 전시/예술 창작활동 등의 커뮤니티형 혁신빌리지 조성
- 주거, 보건-복지, 교육, 환경 등의 지역에 대한 패키지 정주환경 개선 지원
  - \* 깨끗한 충남만들기, 도량살리기 등 **종합적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청이 함께 만드는 **행복더하기 학교**
  - \* 자립형 마을복지 **행복마을(보건-복지통합사업)** 및 충남 전역 긴급의료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지역을 위한 작은 경제 육성

- 지역·마을단위의 공동체경제의 인식과 저변 확대
- 공동체 경제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플랫폼 조성 및 아카데미 운영**
  - \*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및 기금 조성
- 지역기반의 **적정기술 발굴 및 사업화** 유도, 에듀파크 조성
- 시·군별 지역특색에 맞는 3농 혁신 특화사업(지역혁신모델) 개발 및 추진
  - \* 읍·면단위 **지역혁신사업 및 지역농협** 구상을 통한 지역특화모델 개발
-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공익활동가** 양성 및 지원



충남 경제비전 2030 추진 배경과 주요내용 | 13 |

# 충남경제비전 실행기반 구축

### 3. 경제비전 2030 실행기반 구축

#### 1. 경제비전 100대 과제 추진 검토 (2016년)

- **경제비전 2030(2015년 수립)에 대한 100대 과제 실행 점검 추진**
  - 5대 목표, 10대 전략, 100대 추진과제 (3대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과제 추진상황 점검
    - \*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토론회시 100대 과제에 전반에 걸친 추진상황보고회 추진(3회, 2016년)
    - \* 100대 과제 : 55개 사업-기존사업 보완 및 대체, 45개 사업-신규사업
  - 2016년 계획예산 1조 5,111억 원중 8,784억(58.4%)만 예산확보, 사업 추진
    - \* 대부분 국비확보 사업으로, 2015년 말 비전수립 완료에 따라 사업반영의 시간적 제약
  - 72개 과제 사업추진(사업화 및 실행계획 수립 중), 19개 과제 구상검토, 8개 과제 업무 재조정 필요
- **미래지향적 관점의 신규과제로 제시된 사업의 추진 미흡**
  - 기존 사업에 대한 보완 및 신규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정상 추진(사업화 및 실행계획 수립)
  - **신규과제로 도전적 과제의 사업 미추진**(사업담당부서가 없거나 부처간 협업(범부처) 사업이 대부분)
    - \* (예시) 청년종합대책(청년 일자리 및 지원 전반), 생활경공업육성, 보건복지통합마을 등
  - 일부 신규과제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미비로 장기검토과제로 분류

### 3. 경제비전 2030 실행기반 구축

#### 2.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과제

- **경제비전 사업추진의 한계와 대안 검토**
  - (충청남도 내부) 실국간 협업 또는 범부처 과제의 **추진체계 개편 필요** (사업추진조직, 사무분장 등)
  - (중앙정부 등 외부) 예비타당성, 국비반영을 위한 **시간적 측면 고려**
    - \* 국비확보를 위한 세부적 계획수립, 중앙부처의 여건 등 순차적 접근 필요 - 중장기 접근
  - (사업의 성격) **사업의 실제적 한계**에 대한 고려 (충남의 현재 여건에서의 검토)
    - \* (예시) 과학벨트와 연계한 R&D특구 조성, 중국과의 열차페리,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등
- **경제비전 추진을 위한 100대 과제 재구조화 및 중점추진과제 선정**
  - 실국의 추진체계가 명확한 과제에 대해 **자체과제로 전환** (사업의 책임성 강화)
  - 미추진 과제에 대한 재검토(실국별 추진방향 제시 및 논의 추진, 2016)
    - \* 경제상황점검회의를 통한 담당부서 지정,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 방향 제시
    - \* 미추진 과제에 대한 담당 실국과 사업방향 및 사업내용 수정 (50개 과제 재논의, 2016)
  - 경제산업실 주관의 **중점추진과제 선정, 집중화 추진**

### 3. 경제비전 2030 실행기반 구축

#### 3. 중점추진과제 선정과 운영

##### ○ 경제비전 추진을 위한 중점과제 도출

- 경제비전의 의미와 목표를 지양하는 **대표성**을 가지며, **사업간 연계가 가능한 중점추진사업 마련**
  - \* 경제비전의 5대 목표와 10대 전략을 견인할 중점과제의 선제적 실행 필요
  - \* 중점사업선정기준 : ①상징성, ②미래지향성, ③시의성, ④상호연계 및 협력성, ⑤정책선도성
- 중점추진과제이외 과제는 **담당 실국 자체관리과제(84개 과제)로 전환**
  - \* 중점추진과제 14개 과제(제조경), 신규과제 6건, 기존사업통합 6건, 과제종료 및 삭제 3건

##### ○ 중점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 결과

- (실국 의견 수렴 및 추진상황점검 회의) **실국장 토론회를 통한 협업 및 구체화 방안 논의**
  - \* 1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3.11) : 100대 추진과제에 대한 실국 업무협약의 조정
  - \* 2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8.29) : 18대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업무조정
  - \* 3차 추진상황 점검회의(12.19) : 6개 추진사업(실국간 이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논의
- (경제비전위원회 분과 운영) 분과별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방향과 논의(담당실과 참석)**
  - \* 4개 분과 50개 과제 논의(담당실과 팀장급 이상 참여 공동 논의)
- (충남도-연구원 공동워크숍) 추진상황점검회의, 경제비전위원회 논의 사업에 대한 재조정 및 체계화

충남경제비전 2030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 17 |

### 3. 경제비전 2030 실행기반 구축

#### 4. 중점추진과제 추진 및 경제비전위원회의 기능 전환

##### ○ 14개 중점추진과제의 실행기반 구축

- (최종 14개 중점추진과제 추진) 사업추진 및 관리의 책임성 강화
  - \* 각 중점추진과제별 **전담부서 지정 또는 신설을 통한 사업 책임성 강화**
  - \* 미래성장본부(수소경제팀, 산업4.0팀), 청년정책팀, 경제분석팀 등 조직개편 및 신설
- (84개 자체과제 추진) 실국 자체과제로 전환, 경제통상실 총괄 검토
- (실행점검 및 피드백) 경제비전위원회 운영을 통한 실행점검체계 구축

##### ○ 경제비전위원회 기능의 유연화 및 운영효율화

- (2015년) 1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경제비전수립을 위한 미래전망 및 비전 기획**
  - \* 총 8차례 위원회, 경제현황진단, 미래전망, 비전체계 구성, 이슈별 핵심사업 선정 등 추진
- (2016년) 경제비전 주요 추진과제의 구체화를 위해 5개 분과 47명으로 확대 개편 운영
  - \* 전체 33회의 위원회 개최, 중점추진과제 및 미추진 과제에 대한 재구조화 및 논의 추진
- (2017년) 분과구분 없이 통합 풀 구성, **추진사업에 맞도록 10명 내외의 개별 추진위원회 운영(예정)**
  - \* 경제비전 추진과제 실행점검, 신규과제의 발굴과 적용 검토

충남경제비전 2030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 18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연구원 백운성 연구위원  
wsbaek@cni.re.kr

# 충청남도 재난 안전 세부사업 토의

조민상 교수  
(백석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 충청남도 재난 안전 세부사업 토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조민상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안전관련 사업 현황 검토
- III.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 안전충남 비전 2050의 선포를 통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안전충남 비전 2050을 달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실·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실행과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함
-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하여 2050에 적합한 중·장기적 과제를 마련하고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 발굴과제에 대한 각 부서, 각 위원회, 전문가(학계 및 실무계)의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함

## I. 들어가는 말

- 도와 도민의 협력, 자발적 노력으로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안전문화, 안전생활터, 안전복지, 안전시스템, 안전거버넌스를 포함하는 5대 목표와 추진 전략은 충청남도의 관 주도적인 사업이 도민의 참여와 이해로 일상 생활에 안전이 내재되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음
-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반영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세부사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Ⅱ. 안전관련 사업 현황 검토

- 현재 출납은 안전과 관련하여 각 실, 국에서 신규, 계획, 계속, 시책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안전관련 사업을 주요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신규, 계획, 계속, 시책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고자 함

## Ⅱ. 안전관련 사업 현황 검토

### 1. 신규

- 재난안전실, 자치행정국, 기후환경녹지국, 국토교통국에서 신규사업 추진하고 있음
- 주민주도 안심공동체 조성 사업, 실천운동 등은 주민 참여가 중요한 사항
- 주민 참여 중심 사업과 관 주도형 사업을 구분하여 접근 방식 및 운용 방식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순번	실/국	사업
1	재난안전실	행사 시작前 비상대피 안내 실천운동 전개(신규)
2	자치행정국	주민주도 안심공동체 조성
3	기후환경녹지국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사업
4	기후환경녹지국	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5	기후환경녹지국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	국토교통국	교량 및 터널 지진대비 내진보강 사업
7	국토교통국	터널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

## II. 안전관련 사업 현황 검토

### 2. 계획

- 재난안전실, 기획조정실에서 계획사업 추진하고 있음
- 안전상식에 대한 콘텐츠 개발, 안전온도 점검 등은 도민의 자발적 점검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안전점검이 자발성을 기대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단축할 수 있는 타 부서와의 연계방안이 필요함

순번	실/국	사업	분류
1	재난안전실	안전상식 체득을 위한 게임콘텐츠 운용(계획)	계획
2	재난안전실	우리집 안전온도 점검하기 추진(계획)	계획
3	재난안전실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4	기획조정실	산업재해 예방과 원청업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제안	계획

## II. 안전관련 사업 현황 검토

### 3. 계속

- 실·국 전체를 기준으로 현재 계속으로 구분되는 사업은 69개임
- 안전(20), 복지(3), 위험(3), 서민(2), 가족(2) 등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 도민 참여, 협력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 측면으로 접근이 필요함
- 신종 위험 및 향후 문제의 대비를 위한 예방 중심의 사업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ex) 노인, 다문화, 피해자 지원, 위험 정보 수집 등

## Ⅱ. 안전관련 사업 현황 검토

### 3. 계속

#### 1) 재난안전실

- 도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재난안전조직 및 매뉴얼을 정시함에 있어서 선제적 활동을 중시함
- 안전업무 취약성 분석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통계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원인 분석과 신규 전략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실/국	사업
재난안전실	도 안전관리계획 내실화 운영 서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사경 선제적 활동 지역안전지수 향상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관리 재난대응 민관협력체계 구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화천 정비사업

## Ⅱ. 안전관련 사업 현황 검토

### 3. 계속

#### 2)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재, 공연장, 체육시설 재난에 대해 개별적 사업 마련하여 운영
- 문화재는 사고에 대한 사전적인 설비 도입에 문화재 훼손의 우려로 인하여 접근하기 곤란한 부분이 존재
- 공연장, 체육시설의 경우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의 우려가 큼
- 지진, 폭설, 전염병 등 다중 이용으로 우려되는 위험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사업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에서 협조 가능한 인력을 활용하며, 관련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적인 조치가 가능토록 관리 방안 마련
- 유원시설의 경우 안전사고 및 범죄에 대한 대응도 고려할 필요

실/국	사업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연장 시설 안전관리 강화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강화

## Ⅱ. 안전관련 사업 현황 검토

### 3. 계속

#### 3) 농정국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와 관련되는 대비를 강화하고 있음
- 농기계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응시간의 단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농업 종사 인력의 고령화 및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대한 예상 문제 및 사고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
- 신종 가축 질병의 대비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 신속한 위험 요소의 발견 및 인지를 위해 도민과 비상 네트워크 구성이 중요함

실/국	사업
농정국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및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농업기계 안전관리 교육 강화 농기계 안전보호장치(경광등) 설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확대 가축방역사업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 Ⅱ. 안전관련 사업 현황 검토

### 3. 계속

#### 4) 복지보건국

- 안전이 최선의 복지라는 관점으로 적극적 안전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 필요하며,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의 전개가 가능함
- 고령인구의 증가로 면역 취약의 문제, 전염병 확산의 문제, 도내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의 우려가 크므로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차별화된 사업이 전략적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함
- 복지 진단 및 건강 진단 등의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시간 단축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의 접근 필요
- 공무원 및 도내 전문가,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참여하여 네트워크 구성
- 친절서비스 교육을 고려하여 노인 및 장애인들의 심리적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및 장비, 예산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겠으나 인적 측면의 고려도 필요

## Ⅱ. 안전관련 사업 현황 검토

### 3. 계속

#### 4) 복지보건국

실/국	사업
보건복지국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 감염병 사전 예방 및 연중 방역체계 강화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긴급복지사업 농약안전보고나눔 보급 사업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사업

## Ⅱ. 안전관련 사업 현황 검토

### 3. 계속

#### 5) 기후환경녹지국

- 풍수해, 가뭄, 폭염, 한파 등 기상 재해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중
- 기후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실행대책의 마련도 중요하겠으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도 중요함
- 사회재난 중에서 환경, 폐기물에 대한 지도 점검 사업이 중요함
- 고령인구의 증가 추이를 보이는 도 특성을 고려하여 폭염에 대한 대비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ex) 대피 및 보호 시설 확충, 점검
- 산불감시원 활동 및 예방 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소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가 필요함
- 도내 구축된 통신망을 통해 위험 상황 및 우려되는 재해에 대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

## Ⅱ. 안전관련 사업 현황 검토

### 3. 계속

#### 5) 기후환경녹지국

실/국	사업
기후환경녹지국	대청III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하수관로화 사업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식용수사고 예방대책 추진
	공공폐기물 매립시설 지도점검
	산불방지사업
	사방사업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
등산로 정비 사업	

## Ⅱ. 안전관련 사업 현황 검토

### 3. 계속

#### 6) 국토교통국

- 지진대비 교량·터널 안전 진단, 터널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음
-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
- 해당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검토하고 타 기관 및 부서와의 협력이 필요함 - ex) 범죄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건축 및 도시 설계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며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고령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 관련되는 사업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특성을 검토하여 예방 활동 전개가 필요함

## Ⅱ. 안전관련 사업 현황 검토

### 3. 계속

#### 6) 국토교통국

실/국	사업
국토교통국	범죄예방 디자인 환경개선 사업
	고령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슬레이트 처리사업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사업
	국가지점번호 설치사업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Ⅱ. 안전관련 사업 현황 검토

### 3. 계속

#### 7) 해양수산국

- 해양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방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사업이 전개되어야 함
- 해양산업 종사자 및 해양 활동(관광객)의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사업이 운영되어야 함
- 해양사고 및 재난의 유형별 분석을 통해 계절별, 월별, 특정 시기별로 예방 중심의 안전 사업이 마련되어야 함
- 해양사고의 경우 민간의 협력 및 지원이 효과적이므로 이에 대한 비상 네트워크를 관에서 확보하여 상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지원 및 특정 이권, 이익 목적으로 사업에 개입하려는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함

## Ⅱ. 안전관련 사업 현황 검토

### 3. 계속

#### 7) 해양수산물

실/국	사업
해양수산물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노후어선 감척사업 낚시 어선 안전사고 예방 대전항 여객선터미널 유지관리 지방어항 안전점검 적조 예찰·예보 및 피해 예방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기생충)구제

## Ⅱ. 안전관련 사업 현황 검토

### 3. 계속

#### 8) 소방본부

- 지역 내 신도시의 증가, 특수 재난 출현, 고령화 등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의식이 미흡함
- 도민의 안전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을 위해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음
- 사회계층별 맞춤형 서비스 및 응급의료 대응 체계의 강화로 도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함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안전센터 신설 등 예산 지원 뿐만 아니라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적 측면에서의 개선 사업도 필요
- 메르스 등 전염병 출현 시, 이를 통제·관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및 현장 중심의 사업이 보강되어야 할 것임
- 안전에 대한 도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사업이 마련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함

실/국	사업
소방본부	병원전단계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재난 유형·시기별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소방장비 현대화

## Ⅲ. 맺는 말

### 1. 사업 중복성 검토

- 1) 부서별 안전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2)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유사사업의 경우 병합 또는 부서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언

### 2. 사각지대 분석

- 1) 도내 안전 취약 지대에 대한 분석이 필요
- 2) 지역, 계층, 연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통한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측면의 사업이 전개
- 3) 도민과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 사업도 고려

## Ⅲ. 맺는 말

### 3. 안전 취약 분석

- 1) 해당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 취약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2) 중앙정부의 안전 진단을 비롯하여 도내 안전 취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3) 충청남도 안전지도의 구축 및 개선 사업을 통해 부서별 공동 대응이 가능
- 4)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의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원` 사업 등을 도내 안전사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 4. 주민 참여 및 협력 기준 마련

- 1) 많은 부서에서 도민 참여 및 협력을 중요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음
- 2) 도민 참여와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한계를 마련하여 사업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5대 목표별 주민요구와 실행계획 발굴 방향

이주호 교수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안전충남2050」총괄·분과위원회 합동워크숍

다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안전충남 2050

## 5대 목표별 주민요구와 실행계획 발굴 방향

2017. 3. 10

발표: 이주호(세한대학교)



충청남도

### 목 차

- I. 비전 실행계획 수립 개요
- II. 주민요구 분석의 주요 결과
- III. 주민 인터뷰 속 실행계획 과제

## I. 비전 실행계획의 수립 개요

3

### 1 비전 수립 원칙

모든 도민, 기관, 단체가 함께 공유하고 추구할  
미래의 가치와 목표, 방향을 정함

**도민과 더불어 수립한다.**

- 참여를 넘어 도민이 직접...
- 소통을 통해...
  - 도민의 욕구를 파악한다.
  - 공통의 비전을 형성한다.
  - 형성된 비전을 공유한다.

4

## 2 안전충남비전 2050



5

## 3 추진 경과 및 계획

### 안전충남비전 2050 실행계획 수립

- 5대 목표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행정, 민간팀장, 전문가, 이해관계자, 연구원 등 5~7명으로 구성
- 안전비전 공유과정 운영**
  - 공무원 참여 워크숍
- 안전비전 토론회 및 세미나, 시·군 순회 타운홀미팅 개최**
  - 토론회 및 세미나, 워크숍의 수시 개최
  - 시·군 순회 타운홀미팅 개최를 통한 도민의견 청취

6

## Ⅱ. 주민 요구분석의 주요 결과

7

### 1 충남도민의 안전의식

#### ● 충남도의 전반적 안전도 인식



8

## 1 충남도민의 안전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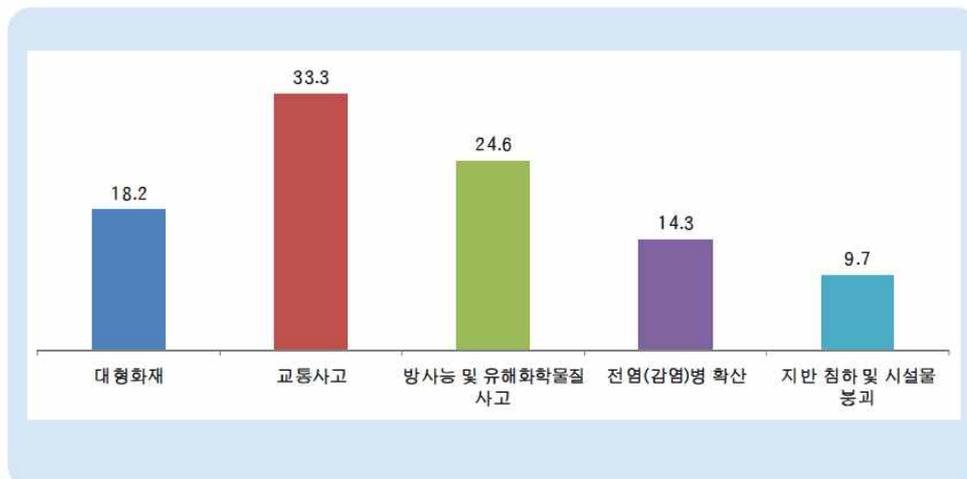
### 자연재난 안전도 우선순위



9

## 1 충남도민의 안전의식

### 사회재난 안전도 우선순위



10

# 1 충남도민의 안전의식

## 생활안전분야 안전도 우선순위



11

# 1 충남도민의 안전의식

## 안전교육 경험



12

## 1 충남도민의 안전의식

### 안전교육 중점 대상



13

## 1 충남도민의 안전의식

### 안전관련 정보 경로



14

## 1 충남도민의 안전의식

### 충남도의 유용한 정책



15

## 2 충남도민 인터뷰 주요 키워드

### 조사 내용 및 대상

구분	개별 인터뷰(현장조사)	그룹인터뷰
조사분야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재화재, 청소년수련시설 도서(섬) 및 해저시설 생활안전, 해양오염, 스킨존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어업작업사고, 세월교(세월교)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농어촌 주민 학부모(초등학생) 시민단체 노인
대상	10개 시군(15회)	6개 시군(13회)

16



## 2 충남도민 인터뷰 주요 키워드

### 도민 제안과제; 알고 있는 혹은 하고 있는

구분	주제	세부 내용
6	교육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더 및 CEO 교육 필요(리더의 인식전환 필요)</li> <li>실제 활용가능한 구급교육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 필요</li> <li>찾아가는 위급상황 대처 교육</li> </ul>
7	공동체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립능력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적절한 유도 역할 필요</li> <li>노년층이 심리적 위로를 받는 대상은 주로 이웃</li> <li>지역사회 공동체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자살, 갈등 등)</li> </ul>
8	사회적 형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 불안정</li> <li>안전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인간에게 이동권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li> </ul>
9	환경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전소 근처 주민들의 건강문제 심각</li> <li>환경오염이 안전을 침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li> <li>축사폐수, 미세먼지, 유독물질 등 심각한 사회문제</li> </ul>
10	새로운 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새로운 재난유형 발생</li> <li>근본적 원인파악과 실효성 있는 방재 정책 필요</li> <li>지자체 차원에서도 자율적 방재역량 강화 위한 노력 필요</li> </ul>

19

## 2 충남도민 인터뷰 주요 키워드

### 도민 이야기; 여전히 고려해야 할 것들

#### 주민이 느끼는 위험 vs 공무원이 생각하는 안전

- 외지인은 와서 빠져 죽는...안내표지도 없는 도랑
- 다리는 놔는데 건너는 길이 물이 많이 고여...겨울엔 위험한
- 안길에 차가 많이 다녀서 과속방지턱 좀 낮달래도...
- 장소나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어디는(청양) 강사수급도 제한적인..

20

## 2 충남도민 인터뷰 주요 키워드 |

### 도민 이야기; 여전히 고려해야 할 것들

#### 누구를 위한 vs 누구에 의한

- 자발적 요구가 없는 것은 접해보지 않아서…몰라서….
- 마을 자체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 인기 있고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도 있지만…특정한 대상 집단은 별로…
-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 스트레스 받는 교육이 아닌…즐기는 교육…

21

## 2 충남도민 인터뷰 주요 키워드 |

### 도민 이야기; 여전히 고려해야 할 것들

#### 서비스 전달은 어떻게?

- 혼자 근무…많아야 몇 가구…못하는 경우도….
- 비상시엔 젊은 이장님들을 통해….
- 젊은 귀농 세대…공동체와 분리…불만…안어울림…  
[귀농은 우대…토박이는 소외]
- 그래도 구심점 역할을 할 리더가 필요…
- 서울엔 외국노동자센터를 통해…관광도..언어소통도…

22

## 2 충남도민 인터뷰 주요 키워드 |

### 도민 이야기; 여전히 고려해야 할 것들

#### ↓ 누구에게 더 서비스가 필요할까?

- 농촌엔 60-70초반이 젊은 연령층... 많으면 75-90세도...
- 사고 시 유가족은 직계가족보다 공동체 전체...
- 젊은 귀농 세대... 공동체와 분리... 볼만... 안어울림...
- 모르고 왔다가 가버리는 다문화 엄마들... 남겨진 아이들...
- 불법이민자가 갈 곳은... 농장...

23

## 2 충남도민 인터뷰 주요 키워드 |

### 도민 이야기; 여전히 고려해야 할 것들

#### ↓ 체감하고 있는 위험들

- 현대제철, 당진화력...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비숙련.. 비전문...
- 인도 없는 2차선... 구시가지 도시계획엔 인도가 없다...
- 장애인에게 불편한 보도블럭... 건물들엔 완강기를...
- 법적인 검사만 통과하면 된다는... 규정 때문에...
- 축사가 하천폐수를... 사고 이후 통제만...
- 예비역 장군이... 심폐소생술 자격증만... 위험관리를...

24

## 2 충남도민 인터뷰 주요 키워드 |

### 도민 이야기; 여전히 고려해야 할 것들

#### ✦ 믿음을 주는 행정서비스가 되려면

- 안전관리 기구는 많은데...안전보장은 안된다...
- 발언을 해도...예산이 없어 반영 안되는...
- 의견 반영 안된 사업들 실효성이 있는지...
- 도로 도색은 하는데...정품 쓰는 거는 누가 체크하나...
- 감독은 공무원이...공무원 감시는 누가...
- 수요자 중심도 맹점이...근시안적 수요자를 잘못 설정하면...
- ...예산 과잉이...매몰비용 때문에 다시 할 수 없다는...

25

## Ⅲ. 주민 인터뷰 속 실행계획 과제

26

## 1 기본 방향

### 안전총남2050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 **도민 스스로의 안전역량을 강화**하여야 함

☞ 소통, 신뢰, 자조, 협력

✚ **재난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분산, 협력, 통합, 유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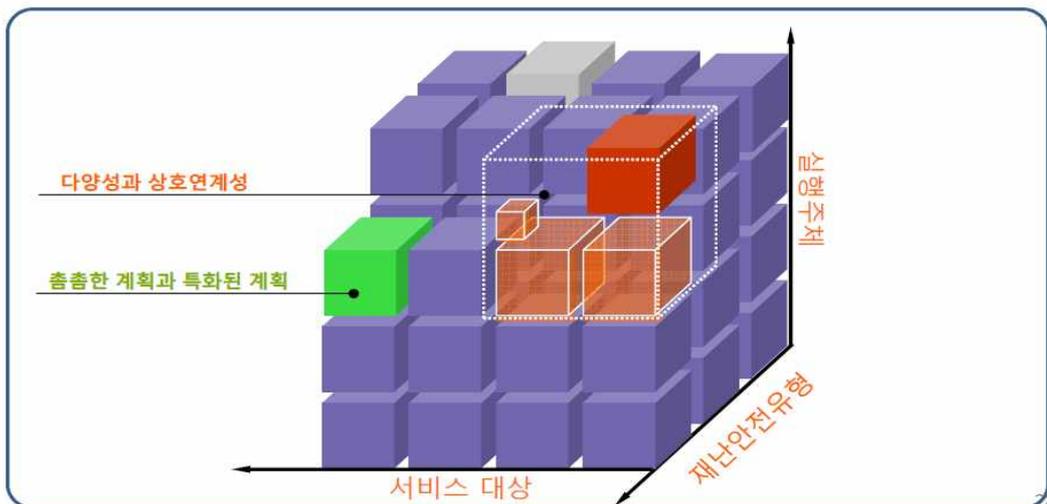
✚ **안전문제는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접근** 하여야 함

☞ 기본권적 안전 추구권

27

## 2 실행계획 발굴 방향

### 안전총남2050 실행계획 발굴 방향



28



## Q & A

## 5대 목표별 주민의견 재검토

1. 높은 의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정착	
<p>▶ 개인의 의식을 사회적 합의로 전환 -&gt; 자율형 안전활동 기반 구축 -&gt; 안전불감증 극복을 위한 자발적 도민운동 전개</p> <p>▶ 교육대상 선정 및 방식의 다변화</p> <p>▶ 교육 훈련 내용의 현실화 -&gt; 자율형 안전활동 기반 구축 -&gt; 안전도민 육성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p>	
	구술내용
<p>교육 기회가 없음 -수요자의 여건 고려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조치 교육 군에서 한다던데 거기 가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li> <li>- 마을단위로 와서 교육하면 받을 수 있어요</li> <li>- 여름에는 점심먹고 3시까지 쉬잖아요. 어르신들도. 마을 회관에 와서 저녁때라든지 해주면 다 들을 텐데</li> <li>- 오라고 하는 거보다 찾아와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li> <li>- 그리고 더 안되는 게 강사들이 누가 오면 인원이 얼마 안 모여지니까 하다가도 안 되더라고. 한두 번은 가는데 일이 바쁘다보면 한번 두 번 빠지고, 그런데 출장을 오시면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지</li> <li>- 주에 한번 두 번이라도 돌아다니면 더 낫지 그러면 생각해봤다가 저녁에 가지. 노인들(80세 이상) 위주로 하려면 낮에 하고</li> </ul>
<p>교육내용 현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터미널을 가봤는데, 장군출신이 CEO인데 위급상황 발생 시 터미널 관리자들은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수료하게 했다더라.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li> <li>- 시골은 풍이 많은데...</li> </ul>

<p>사보험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사병 하나만 보험이 있는데 질병보험 농협에서 정부 50% 해준다. 좋은 조건인데도 안드는 사람이 많다. 보험에 대한 마인드...</li> <li>- 보험 필요하다. 한돈 자조금 출연을 요청해서 농협에서 일부대고 정부 조금 보조하면 보험이 가능할거다.</li> </ul>
<p>개개인의 의식구조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사들은 다 묶는데 1톤 이하는 묶지는 않고 채우기만 하고 5톤 이상은 바퀴 다 고박하고 아닌 것은 “하다마”만 친다.</li> <li>- 도서면은 세월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봐요. 1톤 차가 2톤 실어도 암말 없었는데 지금은 그거 다 돈 받고 그럴잖아요.</li> </ul>
<p>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도색을 하는데 저것을 정품을 쓰는지 누군가는 체크를 해야 한다. 지속이 얼마나 되는지 공무원이 안하면 그 공무원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를 활용하면 좋다</li> <li>-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흘려들어요. 거기는 주민들이 와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그만 사고들 많이 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이면 현장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li> <li>- 여기 녹색어머니 없으면 애들 등하교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도 인력 없다고 안 나오고, 도로가에 주정차된 차만 없어도 덜 할텐데 우리가(녹색어머니회) 등하교시간에만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을 좀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된대요 그럼 너네가 (시청) 와서 단속좀 해라해도 공무원이 7시 8시에 누가 나와서 이거 단속하겠어요. 안 오지</li> <li>- 지역 의용소방대 활약이 엄청 컸어요 지형을 잘 아니까 뒤에서 방어선을 친거죠</li> <li>- 옛날에는 불나면 동네사람들이 다들 양동이 들고와서 꺾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되잖아요</li> </ul>

## 2. 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 조성

- ▶ 농·어업, 산업시설 작업중 사고 -> 안전·안심 위협요인 저감 ->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생활환경 안전규제 강화
- ▶ 초동대응을 위한 대비 -> 구조구급 골든타임 확보 ->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 ▶ 시설개선 -> 안전·안심 위협요인 저감 -> 기반시설 안전성 확보

	구술내용
<p>농작업 사고, 어업 작업 사고 대책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령화, 운동 인지능력 저하</li> <li>- 작업 기계 자체의 안전성 확보 안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 쓰다보면 어려운 점 위험한 것 많은데 큰 대책 있나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승용관리기라는게 있는데 참 위험해요 기계가 물통이 달려서 논에 오르내리다보면 넘어지고 물이 들어있다 보니까 출렁거려서 넘어지고</li> <li>- 콤바인도 기계로 농기계 작업하다가 뒤내릴라면 깔려서 죽었다. 예초기에 돌이 튀어서 장화 위를 맞았는데 그러려니 했는데 부은게 내리질 않았는데 피가 응고된 것을 빼냈다.</li> <li>- 요즘은 상선이 많이 다니니까 부딪히는 사고가 더 많다.</li> <li>-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거 거든요 그런데 손이 끼어서 사고 나고 그러죠. 일이 험하니까</li> <li>- 크레인에서도 사고 많이 나요. 고리같은데만 의지해서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 흔들흔들 하다가 떨어져서 사람들 맞아서 다치기도 하고...</li> </ul>
<p>위급상황에 대한 신고 활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르신들에게 비상시가 되면 대부분 젊은 분들 이장님들 119에 직접 연락하거나 하는건 잘 돼있어요</li> </ul>
<p>미세먼지 대책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매뉴얼 마련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 매우 나쁨 일 때 차문열고 환기하고, 체육시키고 있다. 미세먼지의 영향이 엄청나다는데, 학부모, 교사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li> <li>- 아파트에는 창문을 열지 않아도 환기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학교에 도입하자.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라도 필요하면 기부 받고, 자부담시켜서라도 하면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연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석탄을 코크스를 만들어 내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이 많다.</li> </ul>
<p>축사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심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돈분 이게 농지에 다뿌리 잦아요 간척지에 농지 오염되고, 그 물이 흘러서 저수지로 흘러가고 그게 악순환이다. 저수지가 썩어서 현대 A, B 지구 홍성 축사 돈사돈분을 거기다 뿌린다. 농작물이 안 되니까 비료 더쓰고, 지질이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니까 돈분을 더 뿌리고, 오줌을 물대듯해요...</li> <li>- 후손에게 물려줄 땅인데 수질도 물려주고,</li> <li>- 겨울에는 무방비니까 사람이 안보니까요. 정부에서 무슨 정화시설을 갖추게 해야 한다.</li> <li>- 거름이라고 생각하고 뿌린다는데 축사폐수 처리하는 거다 금전적으로 당장은 도움이겠지만 오염되어 장기적으로는 농가 스스로 폐수 처리를 하게 해야 한다.</li> <li>- 구제역 조류독감 매몰치 관리 안될 정도...</li> <li>- 여기는 축사가 많다. 하천피해의 주범이다. 전체 축사폐수를 25-30% 처리 가능일 뿐 감당 못한다. 자가 처리 되비한다지만 다 오염원이다.</li> <li>- 현대 쪽은 농사를 크게 하니깐 물이 많이 흐르는데 가면 농약병이 수도 없이 많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농약병을 공병보증금 하듯이 든 농약병을 수거해야...흘러서 하천으로 가고 그러지 않냐. 소농들은 농약의 기본사이즈 귀농귀촌인구가 많은데 큰거 한 병 쓰고 그냥 버려지는 것도 환경에 나쁘다.</li> <li>- 유조선사고가 계속 나는데 ... 대산석유화학단지 거기 도비도 근처에 유독냄새가 나는데</li> <li>- 방조제가 많이 막히면서 매립해서 공단이 생기면서 어장이 거의 죽었다. 황금어장이었는데 12개 읍면에 10개 면에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수중촬영하면 굴 어패류 사라지고 황폐화 됨. 갯벌도 오염이 심하고 바지락이 오염에 강한데 바지락도 살기 어렵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제철, 당진화력 위험의 외주화. 유사하게 위험한 공정을 외주화 한다. 협력업체에서 외주를 맡고, 숙련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을 투입한다. 취약하다.</li> <li>- 안전마스크 방진마스크 정규직은 1등급을 주는데, 비정규직은 2-3등급을 준다. 크레인을 주</li> </ul>

<p>대기업, 발전소 도덕적 해이, 생명경시,</p>	<p>는데 유선리모콘을 쥐서 사고가 나더라 크레인사고가 난다. 노동자가 얘기하는데 정규직노조가 얘기했으면 다 들어줬을 거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 하청을 주니까 대기업의 하청인 경우가 많다. 안전시설을 갖추기 어렵고 투입되다 보니 무리하게 가동하면 노동자의 안전수칙을 다 못 지킨다. 납품기한 촉박하니까</li> <li>- 현철에서 나는 사고 대부분은 공장조기정상화를 위해 고로 3호기 조기완공 목표 때문에 무리한 공사고 사고 한꺼번에 5명이 한국내화 죽기도 했다.</li> <li>- 당진화력 석탄이송시설에서 가루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공정 중에 하청노동자들이 사고입는다. 건설 중인 9, 10호기에서 사고나고 굴뚝높이가 200미터 되는데 거기서 작업 중에 떨어지는 사고...</li> <li>- 화재사고도 많다. 석탄 인화성이 많은데 야적하는 경우 자연방화 유독가스가 나오고 한번 화재가 나면 끄기가 어렵다. 불이 나면 유독가스 많다.</li> <li>- 코쿠스 가스 유출로 노동자 중독으로 숨지기도 했다. (당진) 2010년부터 부생가스를 연소시켜서 만드는 발전소 가스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유출되는 유출사고가 집중됨</li> </ul>
<p>발전소, 송전탑 -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주 가까운거리에 사람이 산다. 현철과 (가곡리, 동곡리) 는 농작물에 싯가루가 나오기도 한다. 교로2리 3리 주민들이 사는 곳과 발전소가 가깝다.</li> <li>- 송전탑이 526개 당진에.</li> <li>- 철탑주변 석문면 철탑아래 집이 있는 경우도 있다.</li> <li>- 발전소 주변에 암 환자 급증하는데 발전송전탑 아래가면 형광등 불이 들어올 정도. 건강 이 매우 안 좋다.</li> <li>- 지역에서는 왜 그런건지 발전소 영향을 모르고 지역주민 일부는 발전소로 인한 조기사망이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산 석유화학공단 서산이지만 바람방향이 당진이다. 유조선 사고 기름유출사고 당진 난지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갈등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과 지역</li> <li>- 지역주민간</li> <li>- 외국인</li> </ul>	<p>비경도 도비도 피해입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소 생기면 주변지역 지원금받아서 당진시 공설운동장 터미널, 문예의 전당 짓고, 석문면 개발위 부자되고, 지역주민들은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 혜택이 갈뿐 지역주민들은...</li> <li>- 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지원에 의한 법률이 문제가 있다. 사회적 약자가 피해보는데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른사람이다. 특별지원금의 가산금이 있다. 당진시장 군수가 의회 동의로 신청을 하면 0.5% 가산금을 준다. 지역 자존감에 문제가 생가고, 지역주민들 분열되고, 문제가 많다.</li> <li>- 산단주변에 이주단지가 생기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큰 지역문제화 된 것은 없었다. 지역사람들이 혐오가 많은 것이 더 문제더라</li> <li>- 외국인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는데 그 시각 자체가 더 문제</li> <li>- 언어폭력이 많아요. 그걸 힘들어하고 오래 기억해요 강하게</li> <li>- 문화차이 때문에 싸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알려주면 수용하고 하는데...</li> <li>- 서산은 돈만 벌고 방재작업도 안해요. 피해는 무조건 당진이 봐요</li> <li>- 자자체 소관이다. 피해 때 마다 예비비로 해야 된다 예산도 큰문제다. 부직포 마스크 장비 나눠주는거 해야 하고, 1인당 키트가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회사에서는 환경부담금을 내는 걸로 책임을 다 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환경부로 가서 분배가 되는건데 여기까지는 오지도 않는다. 회사마다 얼마씩 내놓고 예치를 해놔라 그러면 이자만으로도 방재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li> <li>- 관할이 당진이면 벌써 했다. 세무 건축 환경 어느쪽으로든 걸어서 만들어내는데 서산은 서산 주 세금 40%가 대산화학이다. 지방산단이니까. 도에서 조율을 해야 하는데 건의를 수없이 해도 도에서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안한다. 도에서 압력을 안 넣으니까 그런거다. 서산이랑 도만 손잡고 하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층건물에 있으면 소방대피가 어렵다 완강기 설치가 되어있지만 우리가 이용하기 어렵다. 다</li> </ul>

<p>재난취약계층이 좌절하도록 하는 시설 문화</p>	<p>리에 힘이 없지않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련된 것 지진 대처를 할 수 있는게 있을까 싶어요. 다 살자고 도망갈 때 우리가 갈 수 있을까...</li> <li>- 룸메이트가 불나면 우리 어떻게 하죠 할 때 누가 구해주면 모르겠지만 죽어야지 할 정도로 말한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안전 불감증이거나 아님 자포자기 상태...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안되어있다.</li> <li>- 손기능이 정상적이면 모르지만 유리를 깨서 놀러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싶어요</li> <li>- 집안에서만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들은 바닥에서 소리만 지를 수 있어요. 혼자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크다는거죠.</li> <li>- 청각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요</li> <li>- 청각장애인에게 화재 신호를 주는 방법을 가정에 설치할 수 있게 하면 좋다.</li> <li>-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민편을 안들고 사업주 편을 든다. 주민들이야 걱정만 하지...</li> </ul>
<p>많이 사용하는 곳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보여주기 식에 그쳐서는 안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천시내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만든 건물은 3~4%뿐이다. 계단 2개 이상은 올라가지 못한다. 서울은 그래도 다닐만 하다 하더라</li> <li>- 저상버스와 연석까지 간격이 맞아야 하는데 버스정류장과 리프트의 높이가 맞아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맞는다</li> <li>- 공공기관은 잘되어있어요 거긴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허가사항이니까 잘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공공기관을 갈 일이 인생에 몇 번이나 되요 도로나 일상생활이 더 중요해요</li> </ul>
<p>시설이 없어서 위험에 노출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가에 있는 공용주차장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도로에 주차할 때도 많아요. 차문을 열고 5분은 있어야 하는데 차가 뽕뽕다니는 곳에 어쩔 수 없이...</li> <li>-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등급에 따라 다르게 하던지 해서.. 우리도 무작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늘려달라는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집에 장애인 있는 사람들도 차에 그 스티커 붙이거든요. 본인이 장애인일 때하고, 가족 중에 있는거 하고 좀 분리를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차장</li> </ul>

	을 쓸 수 있는 확률이 좀 늘지 않을까요?
초동대응을 위한 예방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문화재까지 예산 투자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는데 문화재 성격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낙산사 화재가 당해 문화재에서 난거냐? 낙산사 안에서 났나? 저 멀리서 불이 나는데</li> <li>- 작은 소방차 이런거 기한 연안 된 거 매각이든 처분할 때 이런데다 기증이든 매입이든 해서 여기다 비치해줬으면 좋겠다. 처분하는 그런 소방차들은 기능저하가 멀리 출동해서 다닐 때 문제되는거지요. 안에서 다니는건 전혀 문제 기능상 문제 없는거다. 초기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차 여기는 작은게 더 좋다. 경남도에서는 그걸 많이 했어요 주요한 산에 있는 사찰에다가 통도사고 그렇고 표충사도 그렇고,</li> </ul>
<b>3.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실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정보 접근권 확대 -&gt; 재난안전관리 정보수집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li> <li>▶ 수요자 중심 안전서비스 체계 구축 -&gt; 도민의 안전요구 파악을 통한 맞춤형 지원</li> <li>▶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gt; 관리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적 관계복원을 통한 안전 확보</li> </ul>	
	구술내용
잘못된 의견수렴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이면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하는 절차가 무시된다. 주변사람 몇몇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다고 한다더라</li> </ul>

<p>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p> <p>-개인, 사업주, 공공기관</p> <p>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설마련을 불필요한 추가비용으로 인식해서는 안됨</p> <p>- 나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업장, 민간 업장 경사로 설치에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설치하게 도와줬으면...</li> <li>-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당들에 착한가게를 선정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돈은 다 해준다고 해도 업주가 싫어한다. 다른 손님이 불편하기도 하고, 경사로 일부가 도로로 나와야 하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식당이나 가게를 참여시키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li> <li>- 장애인이 고객으로 왔을 때의 불편함 등을 인식을 좀 바꿔야 할 듯...권고를 하고도 안 지켜지면 과태료 물리듯이 강제를 좀 줘야 한다. 업주 자체가 생각을 해야 되는거고...</li> <li>- 일본가니까 주위에서 길이 자동으로 열려요 일반시민들이 양보하는 의미일수도 있고, 국가 적으로 교육이 되었겠죠. 우리나라 어딜가도 기분나쁘고 워낙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li> <li>- 라스베가스 자동문이 버튼이 벽 옆에 있어요. 누르면 문과 거리 2-3미터 앞에 버튼이 있어요. 탁 누르면 짹 열리더라고요</li> <li>-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해 주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좋은 자리가 아닌경우가 있어요</li> <li>- 이왕이면 모든 경사로가 없애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보는데 노인 유모차 쓰는 사람이 더 많이 써요 다수의 논리는 모르겠지만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실제로는 노인 유모차가 쓰잖아요. 그런 것 들을 비장애인을 필요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 많이 만들어 놓으면 다 쓰잖아요</li> </ul>
<p>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장치가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수수료 일단 적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야매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li> <li>- 스티커를 장애 유형에 따라서 진짜 레벨 차이를 두는 것을 대중방송에서 했으면 좋겠어요.</li> <li>- 4명 중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의 장애인이예요. 걷는데 힘들 수는 있지만 장애인 주차장이 있어야만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li> <li>- 보호자가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해도 스티커가 똑같이 나와요. 본인이 장애인인경우에 주면 확률이 커지잖아요.</li> </ul>

<p>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필요를 파악하는 장치가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예전에 여자친구를 만날 때 이동 할 때 내가 장애 때문에 못하는걸 보여주지 싶어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편과 우리의 실제 불편이 달라요</li> <li>- 정보가 부족 한거예요. 도시마다 주요한건 나오지만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도 그런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면 좋을텐데</li> <li>- 위락시설 들어가 있는 건물도 안전에 관한 강력한 허가 부분 규제 하면... 건물 지을 때 지역 내 장애인 협회 당사자가 몇 명 들어가서 봐주든가 해서 심사기준을 마련하면 개선되지 않을까</li> <li>- 서울시에서 장애인 관광지도 만들어요. 일상생활에 적절한 편의 편의를 공유해야 해요. 편의 시설과 안전이 같이 가요 그게 곧 안전인건데</li> </ul>
<p>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사렛대가 장애인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대학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학교 자체는 비에프 인증을 받았는데 학교 주변은 인도정비도 안되었고, 방심하고 다니다가는 넘어질 수도 있고, 안전하고 연결의 지어서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li> </ul>
<p><b>4.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간 협력의 어려움 -&gt; 실질적인 현장 대응능력 향상 -&gt; 재난대응기관간 협력체계 강화</li> <li>▶ 지역자율 SOP 마련 -&gt; 행정지원 시스템 강화 -&gt; 재난안전관련 계획 및 매뉴얼의 실효성 강화</li> <li>▶ 행정의 책임성 -&gt; 행정지원시스템 강화 -&gt; 재난안전 성과 평가 및 결과활용체계 구축</li> </ul>	
	<p>구술내용</p>

<p>의견 목살이 반복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안길에 차가 많이 다니는데 과속방지턱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줘요.</li> <li>- 의견을 내면 도지사에게 직접전달이 되지 않고, 건의사항이 센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못한다. 불이익이 생길까봐(장애인자활센터)</li> <li>- 개인적으로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 아이엘 센터들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요. 왜 반영이 안 되는지는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모르겠어요.</li> <li>- 불편한게 있어도 그전에는 싸웠는데 안들어주니까 이제는 안해요.</li> <li>- 수태 나가서 의견을 말해도 반영이 안 된다.</li> <li>- 발언이 받아들여지려면 예산이 있어야 된다. 예산타령을 한다.</li> <li>- 장애 1,2급들이 조금 경사로가 있으면 못 올라갑니다 도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져요.</li> </ul>
<p>협력의 강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를 구성하라고 하는데 이게 운영하기 너무 힘들다. 담당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그렇다고 유지도 잘 안되고 담당자 바뀌면 또 새로 시작 해야되고</li> </ul>
<p>협력을 위한 자구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만들었다. 여기저기 자료 찾아보고 인터넷 보고 해서 안전점검단도 운영한다</li> <li>- 관련 단체들 모아서 시청, 소방서, 해양경비대 이런 곳. 장비점검 프로그램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도 자문 받고 한다.</li> <li>(자주 만나나?) 분기별 1번 씩은 모인다.</li> <li>(기관의 직급은?) 교통레저계 계장, 센터장, 운영과장, 보령시청 주무관 이다.</li> <li>(운영은 잘되나?) 각자 바빠서 시즌 시작 전에 시즌 후에 모이고 하는식으로 좀 조정을 한다.</li> </ul>
<p>새로운 재난 등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염이라 선녀벌레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 더우면 더 많은 것 같다. 비가 자주오면 덜한데... 유실수에 많이 나누 줘를 빨아먹는다. 방재가 필요하고... 없애야지 몇해 후에 다 퍼지면 ...</li> <li>- 갑자기 올해 생겨다. 앞으로 내년도 걱정이고 기후가 변하고 날이 뜨거우니까 더하고, 오월부터 계속 뜨거웠고, 작물들이 적응을 못 한거다.</li> </ul>
<p>기후변화 특히 가뭄에 대한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li> </ul>

필요함 (지역실정 고려)	- 가뭄피해가 많아 질텐데 비상상수원 고민해야 한다.
시설물 설치 할 때, 안전에 대한 고려를 의무화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	- 배수구가 구멍이 넓은 곳은 앞바퀴가 빠져서 넘어져요 ...작게 여러개 만들면 안 그럴텐데 ... - 다리를 새로 놔는데 거기 돌아가는 길에 물이 고여요 겨울되면 얼겠지. 내가 하면 그렇게는 안할 것 같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말안듣는사람을 위주로 정책을 펴라. 잘하고 잘못한다 하는거 모범생이 10 불량학생 100이 있는데 불량농가는 죽은 돼지도 위생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폐수 무단방류하고 불법을... 항상 청결해야 되는데 식당에 위생개념이 없다 그러면 문제 생기는것이랑 똑같다 - 기본 100% 해주고 요율산정해서 공제 하듯이 해서 원발농가 보상을 바꿔줘야 한다. 그래야 신고를 하고 근절이 된다 - 배가 어선을 갖고 다니면서 진입을 조사하고 했는데 도비도에 해운사가 있는데 어선타고 조사하면 고발을 한다. 난지도 사람중에 사람이 빠졌는데 건졌다 그런데 고발당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누가 하려고 하겠나.
재난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음 -역할을 찾아가야 함	- 제일 중요한건 도청의 역할이다. 시도별로 달리 할 수도 있다. 충남이 문제면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어 유연하게 방역을 하고 지역적으로 차이를 두고 여건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는데 표준화라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잣대가 똑같다. -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SOP를 만들 수 있는데 방역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함정	- 수요자 중심의 재난관리 안전관리가 돼야 된다는건데 수요자 중심의 맹정도 있다. 당진은 하상주차장 만들었는데 수해 때 작살나고도 또 만들었다 근시안적인 수요자를 잘못 설정하는 문제가 생긴다. 수요자의 특징이 중요하다 - 홍성 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같이 재난이 생길 때 그것을 분위기를 타서 토건으로 가는 것 예산낭비일 뿐아니라 재난을 키우게 된다. 환경문제, 산사태 같은 것...장기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는 재난 관리가 되어 한다. - 당진천 독도 6번 뒤집었어요. 토건세력에서 공사비 빼먹는게 하천 건드리는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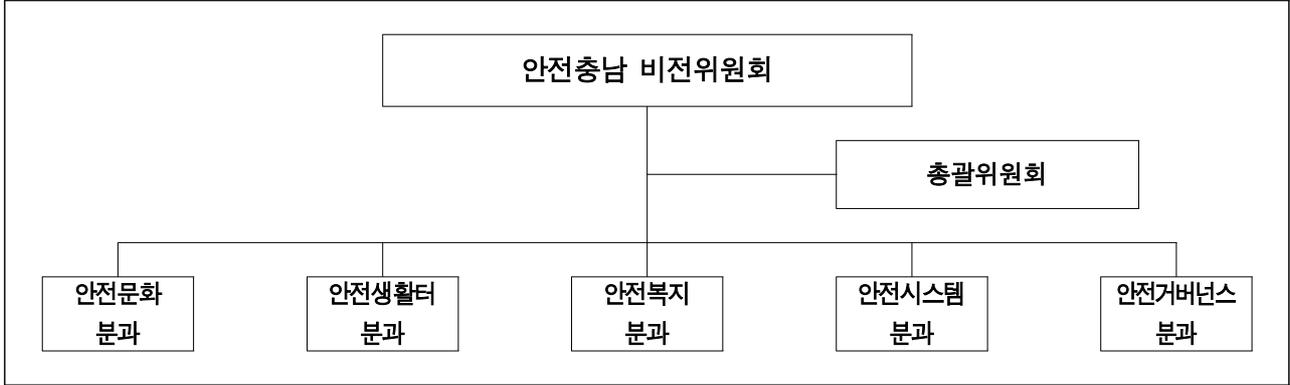
<p>행정의 책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의 지속성만 이야기하는데 SK 화력발전소도 산자부에서 하는 말이 매몰비용얘기만 한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죽으라는 거냐. 행정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이 없고. 주민은 안 보는거다</li> <li>- 학교 운동장 바로 옆에 학교를 둘러싸고 방음벽을 세우고 4차선 도로를 세운다고 해요 답변은 이미 잡혀진 도시계획도로고 지중화하는것과 예산차액이 너무 커서 그냥 한답니다. 언제 세워진 계획이냐고 했더니 70년대 계획이랍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와서 도시계획이라 도로를 세운다니 할 말이 없어요.</li> <li>- 민원은 회람이 없기 때문에 부서 간에 핑퐁을 한다. 인허가에서 하는 회람 제도를 적용하면 될 것 같다.</li> <li>- 성과보고를 책임을 누가 하느냐가 곤란한데. 연계사업 성과 점수배분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점수주고 하는 것 보다는 총대 안매고 편한게 더 좋으니까 그렇다. 상벌에 대한 조절을 하면 가능한거 아니냐</li> </ul>
<h3>5.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역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관찰 -&gt; 지역특성에 기반한 안전거버넌스 운영 -&gt; 지역공동체 맞춤형 안전거버넌스 모형 개발</b></li> <li>▶ <b>협력을 위한 실질적 지원 -&gt; 지역특성에 기반한 안전거버넌스 운영 -&gt; 협치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b></li> <li>▶ <b>지역사회 활성화 주민참여 -&gt; 도민주도형 안전활동 영역 확대 -&gt; 자율형 도민 안전모임 활성화/</b></li> <li>▶ <b>지역 리더에 대한 안전교육 -&gt; 도민 주도형 안전활동 영역 확대 -&gt; 조직 리더의 안전역량 강화</b></li> </ul>	
	<p>구술내용</p>

<p>지역사회 활성화가 중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문제가 힘들 때 친구덜 언니덜한테 얘기하는거 뿐이지 뭐 있어 자식은 든든한 맛이 지 객지가 있고 다 몰라. 이웃 간에 어울려살아야지 자식들은 뭘 알아. 노인네들 하루만 만나와도 들여다보고 대문만 늦게 열어도 왜 이리 늦게 여나 하고 두드려보고</li> </ul>
<p>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 참여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화합이 잘 되는데 나서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li> <li>- 구심점 역할을 하는 리더가 있으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요. 성격이 좋고,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고, 차량이 좀 있고 그런 분들이</li> <li>- 특별한 집단을 꼭 집어서 하는 것은 별로인 것 같아요.</li> <li>- 대상자만 대상으로 하면 주변 선입견도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소외감을 갖기도 하고요. 어려운 과제물, 그리기 만들기 이런건 비교가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li> <li>- 마을 기업 공동체 하면서 어려운 점은 원래 남 잘되는 꼴을 못보는데, 시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심스럽고 말을 아낀다. 마을분들인데 마을 공동체로 하자고 할 때는 안하고 조금씩 커지니까 또 시기로 돌아오고</li> <li>- 자발적으로 뭘 하자고 하지는 않아요 접해보지 않아서 요구도 적은 것 같고요.</li> <li>-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본적 없어요.</li> </ul>
<p>새로운 지역사회 구성원 등장에 주목해야 함 지역사회 활성화의 방식변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은 사람들 60대는 귀농해온 분들이고 원주민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공통의 화젯거리도 없고, 겨울에 회관생활을 하면 식사를 같이 하거나 하면 준비하는 것을 젊은 분들이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불만스러워하기도 해서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li> </ul>
<p>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마을 이장이 관심이 있나, 열의가 있나에 따라 다르다. 잘하는 열의있게 하면 경관도 가꾸고 가로등도 있고 하는데 좀 소외되는 동네나 이장이 관심없거나 하면</li> <li>- 각 단체장들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더라 면회장 정도되는 양반들은 교육을 좀 시켜서 ...</li> </ul>

<p>자살유가족이 지역사회 주민으로 변화함-관리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날 경제적으로 자녀와 갈등이 있다가 약물로 자살 시도 하고 며칠 뒤에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주변 어른들 마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119에 모셔갔는데 발견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었어요.</li> <li>- 유가족이 직계가족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관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li> </ul>
<p>결국은 예산문제 돈 보다 아이디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 돈문제다.</li> <li>- 여기는 도색도 다 지워지고, 누가 여기를 학교 앞 인줄 알겠어요.</li> <li>- 이거 해달라고 몇 번 요구했는데 돈이 많이들어서 안된대요.</li> <li>- 실종노인찾기 이런거 재난문자처럼 문자 뿌리면 되는데 그걸 왜 안하나 택시기사 이장 새마을지도자 기동순찰대 방법대원 모든사람에게 문자가 찍간다. 30분만에 찾는다 예산이 많이 안 들고도 제도 정책만 가지면 할 수 있는게 많다.</li> </ul>

# 「안전총남 2050 비전위원회」 분과 운영

## ① 분과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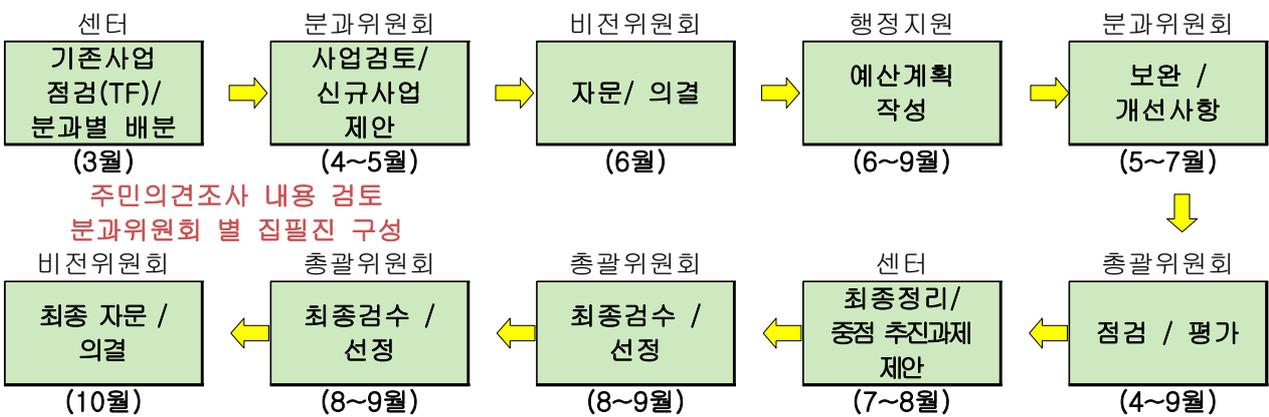
분 야	인원	회 의 주 기	위원장	위 원	협 력 기 관	행정간사
총괄위원회 (13명)	12	2-6월 격주, 7-12월 월1회	이재은	류희인, 유병훈, 조민상 이상진, 양기근, 이주호, 김겸훈 김근영, 배동철, 이동규, 이창길		윤찬수 (안전정책 과장)
안전문화분과 (8명)	7	4-6월 격주, 7-10월 월1회	조민상	노황우(한밭대) 김운호(목원대) 이성애(마음상담센터장) 김용광(바르게살기운동충청남도협의회장) 김덕일(안전보건공단 천안지사장) 권기동(교통안전공단충부지역본부장)		안상만 (안전문화 교육팀장)
안전생활터분과 (7명)	6		이상진	허재영(대전대) 배동철(호서대) 류진하(계룡시자율방재단장) 조성수(경찰청) 서동철(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금강홍수통제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유역환경청	우태환 (경보통제 팀장)
안전복지분과 (7명)	6		양기근	우주형(나사렛대) 정원희(건양대) 이종원(충청투데이) 임상욱(한국전기안전공사) 김현규(前 道 보건복지국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환경운동연합	조대호 (안전정책 팀장)

안전시스템분과 (7명)	6	이주호	위금숙(위기관리연구소) 김근영(강남대) 이순옥(충남간호사회장) 김효중(32사단) 김성찬(119광역기동단)	금강유역환경청 육군32사단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명완호 (사회재난 대응팀장)
안전가바너스분과 (7명)	6	김겸훈	류상일(동의대) 오미숙(녹색어머니회부회장) 곽병철(적십자사충남지사) 강창환(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김지훈(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장)		조모연 (안전비전 TF팀장)

※ 분과위원 위촉 : 분과위원장-행정간사 재량사항

## ② 위원회 운영

### ○ (운영 프로세스)



- (분과위원회 역할·기능) 안전비전 각 목표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 및 신규사업 아이디어 제안, 보완·개선사항에 대한 점검 추진과제별 2~4개 실행계획 사업조서 작성(예산계획 제외) 및 사업설명서 작성 - 분과위원장 주관

- (분과위원회 회의개최) 4~6월 격주/ 7월이후 월 1회

## ③ 실행계획 작성관련

- (계획 설정 주기) 실천을 위한 단계 구분

I: ~2030년 - 단기/중기/장기 세부적으로 작성

II: 2030년~ - 단기/중기/장기구분, 장기는 제목·개요수준작성

- (사업설명서 작성) 장기사업은 핵심/선도 사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사업 설명서 별도작성-(20p 분과별 집필진 활용)
- (실행사업조서 작성)

## 실행계획서 작성 목차

(비전)행복한 안전충남 다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립니다.

### I. (목표)

1. (전략)
  - 1) (추진과제)

**세부 사업명 :**

**전체개요** - 필요한 경우보충설명을 위하여 사업설명서 작성 별도첨부

#### 1. 배경 및 필요성

○

#### 2. 사업개요

○

#### 3. 추진계획

○

#### 4. 사업내용

○

#### 5. 예산계획

○

#### 6. 기대효과







---

---

2017 안전충남 2050 비전위원회 워크숍 자료집

---

---

발 행 일 : 2017년 3월 10일

발 행 인 : 유 병 훈

편 집 인 : 조 성

김 다 영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Tel) 041-840-1230

인 쇄 처 : 예로니모상사(충남 계룡시 금암로 192)

Tel) 042-841-0264